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입시의 방향

이 현 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I. 들어가는 말

우리 교육은 지난 50년의 반세기가 넘는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학입시는 우리나라 교육 정상화의 고리로 인식되어 왔고, 이번 2008년 입시개혁안까지 합쳐 해방 이후 크게는 15차례, 세부적으로는 무려 36차례나 바뀌어 왔다. 특히 대학입시의 문제는 교육문제의 범주를 벗어나 전 국민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고, 오늘날은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인식될 정도가 되었다. 그동안 대학입시제도의 빈번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 정책변화의 기조는 주로 대학입시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맞추어져 왔다. 즉 대학입시의 국가관리 정책, 대학자율관리 정책, 그리고 국가와 대학 공동관리 정책이 반복되는 양상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대학입시 개혁과정에서도 문민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학입시 정책은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주고 다양한 전형요소를 설정함으로써 국·영·수 위주의 교과중심 선발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입시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열 과외 등의 사교육비 지출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학입시 정책은 어떻게 사회적 물의를 배제하며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교육 기회를 공정히 배분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왔을 뿐 하위단계인 중등학교교육에서의 파행적인 입시위주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온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 반세기가 넘는 동안의 대학입시 개혁 노력은 대학교육의 이념과 성격의 변화에 따라 잠재력을 갖춘 인재발굴의 차원에서 변천해 왔다기보다는 대학교육의 수요 과다에서 빚어진 과열 경쟁과 그로 인해 야기된 교육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입시제도가 변화를 거듭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반세기 동안

거듭된 입시개혁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때이고 지금의 대학입시 정책을 재검토하여 건전한 고교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적 사고를 중시하는 대학입시', 21세기에 필요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진정한 '인간교육을 위한 대학입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시점이라 본다.

II. 우리나라 교육현실과 대학입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위기라는 데에는 커다란 이의가 없다. 우려의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상적인 수준이라든가 나아가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교육체제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로서 교육정책의 실패, 교사의 질 관리 소홀, 학교체제의 비효율성,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의식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된 대학입시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였고,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생들의 교육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경직된 정책에서도 그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단면들을 살펴볼 때, 저효율 고비용 정책의 주된 특성을 배제하지 못한 채 학교효율성을 기저로 한 정책보다는 학생경쟁 위주의 정책에 급급해왔고, 교사의 질 제고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의 향상보다는 단순히 입시위주 교육 등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온 병리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해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처럼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비롯한 교육위기의 극복이 절실한 과제

로 등장한 적이 없을 정도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학교붕괴, 교실붕괴, 교단붕괴, 교육상실, 기러기 가족 등의 심각한 용어들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극명하게 표현한 말들로서 일반화된 지 오래이고 교실에서 공부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많은 것은 어느 학교든 일반적인 교실풍경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자고 입시준비는 학원에서 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고, 많은 교사들은 좌절과 자포자기적 방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의 학교는 우리 교육의 아픈 단면이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긴 안목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감안할 때 교육상실의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할 수 없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붕괴는 학업성취 수준에서의 결함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 있어서는 '인성붕괴'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1. 교육의 현실

고교교육 체제와 대학입시 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현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암기식 입시위주 교육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이제 수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교실위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실위기 현상은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등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유사한 현상이 있었으며,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는 현재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서

있는 Silberman(1970)같은 학자는 이러한 교육의 위기를 구조적·정책적 문제로 진단하면서, 학교교육은 획일화된 틀 속에서 학생들에게 순종과 침묵을 강요함으로써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¹⁾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계층상승 이동 등 사회적 평등 기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교육의 위기는 교실과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 특히 고등학교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입시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고교평준화 틀만으로 획일화된 우리 고교교육 체제는 자발성과 창의성 신장에 한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Stevenson과 Stigler(1994) 역시 미국교육의 위기는 훈육의 부재와 학부모 등 가정 역할의 붕괴, 학교체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교사들의 동기부족 등 구조적 틀 속에서 기인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²⁾

이러한 교실위기의 문제는 비단 미국의 상황만은 아니며, 이웃 일본에서도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물론 일본에서의 교실위기 현상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습도피 현상이나 훈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수업활동의 장애를 뜻하는 의미로서 인식되어 있다.

결국 교실의 위기는 나라를 불문하고 효율적인 수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총칭할 수 있으며, 학생의 동기부족과 교실 내

행동상의 일탈, 교사의 의욕상실, 교과 내용이나 방법상의 결함 등 제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문제상황을 야기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흔히 우리에게 앞서 서구사회나 일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왕따, 원조교제, 교사폭행, 교실 내 무질서,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등이 모두 교실붕괴의 문제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실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①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기존 산업사회 학교모형의 실패, ② 교사와 학생 간 세대 격차, ③ 교사의 비효율적인 역할수행 ④ 정부의 교육규제와 관료주의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³⁾

또한 ⑤ 학교나 교사가 가르치는 지식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유용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 ⑥ 교육경쟁 위주의 교육개혁 추진⁴⁾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학교교육 내용과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교육체제 등이 그 주요원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제요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대학입시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획일화된 입시준비형 교육에 따른 교육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이 주가 되는 고교교육 체제에서의 교실붕괴는 초등에서 대학까지 상호연계 고리를 지니면서 구조화되어 있다고

1) Silberman, C. E.(1970), 『Crisis in the Classroom the remaking of American Education.』(New York: Random House).

2) 이현청(2001), 『미국교육의 반성』(서울: 원미사).

3) 이현청(1994), 『교육사회학』(서울: 양서원).

4) 이인규(1999), “무너지는 학교, 흔들리는 교단,” 『창작과 비평』, 27권 3호(1999 가을).

〈표 1〉 교육위기의 구조

특성	교육 단계		
	유아·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 내용	서구지향교육	입시위주교육	교육공동화교육
현상	교육방임, 교육학대기	교육학대기	교육방임기
단계	입시진입 단계	입시준비 단계	입시완료 단계
	과잉, 과열교육	암기위주 입시교육	-
역작용	과열 영재/특기교육	학관형 교육	취업·편입·고시형 교육
	과열 조기교육	조기유학준비 교육	
공/사교육 관계	사교육 = 공교육 사교육 > 공교육	사교육 > 공교육	사교육 > 공교육
교실현상	예비적 교실위기	교실위기	교육부재
교육구조나 체제	평준화와 서열화 혼합 체제	인위적 평준화 체제 (고교교육) 평준화와 학력차 혼재 체제	고착된 서열화 체제

※ 출처 : 이현청(2001). 초·중등교육 위기와 대학인성교육의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포럼 p. 5

볼 수 있으며, 유아와 초등교육에서는 비교적 평준화 체제와 서열화 체제가 혼합되어 있는데 반해 중등교육인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인위적이고 획일화된 평준화제도를 견지하고 있는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⁵⁾

〈표 1〉에서 교육위기의 구조를 도시한 바처럼 교실위기의 현상이 있는 것은 중등교육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유치원,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예비적 과정을 거쳐 심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교육적 붕괴현상은 입시가 완료된 대학교육에도 영향을 주어 지나친 표현이 될 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도구적 교육에 불과한 '진정한 교육이 없

는 교육' (educationless education) 현상까지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근자에 대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인성교육 또한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모두 중등교육의 위기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는 획일화를 강요하는 입시위주 학관형 교육이 초래한 결과이며, 이에 따른 기초교육의 결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 볼 수 있다.⁶⁾

이러한 위기구조는 시대 상황적 여건 변화와 학습자의 특성 변화 등의 제반요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대학입시위주교육에 치중된 고등학교교육체제가 중등교육의 교실위기 현상을 초래한 주요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5) 이현청(2002), "한국교육의 구조적 이해 : 한풀이 교육론," 한국교육정책협의회 자료(미발간), 교육개혁위원회.

6) 이현청(2001), "초·중등교육의 위기와 대학인성교육의 과제," 대학정책포럼자료집(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pp. 6-8

2. 대학입시 개혁 50년의 반성

우선 대학입시 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지난 50년 동안의 대학입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껏 대학입시 개혁은 수없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렇게 거듭해서 대학입시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있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는 대학진학에 대한 지나친 선호를 촉발시켜 왔고, 심지어는 교육·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자리잡아왔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과다에서 빚어진 과열경쟁과, 그로 인해 야기된 교육문제와 사회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빈번히 변화되어 왔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1983년까지의 대학 독자적인 선발체제에 의한 대학별 단독시험제도가 있었고, 1954년의 대학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고사의 병행 시기가 있었다. 그 후 1961년까지 내신제 활용을 통한 대학별시험이나 무시험제도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부정입학 등의 우려 때문에 또다시 대학입학 자격 국가고시(1962~1963)제도를 재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자율과 학생선발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또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도를 1968년까지 도입하게 된다. 그 후 다시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고사를 병행하는 제도를 1980년까지 도입하게 되고, 1982년부터는 대학입학예비고사가 대학입학 학력고사로 바뀐 후 고교 내신성적을 병행해서 선발하게 된다. 그런 후에 다시 논술고사가 선발요소로 추가되고 면접이 병행되는 등 고

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고교 내신성적과 면접의 병행은 적격자 선발에 필요한 충분한 전형자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암기위주 입시교육이 성행한다는 점 때문에 1995년 5.31 교육개혁에 의해 새로운 입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 후 2002년 입시안을 근간으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실시에 따른 보완과 이번의 2008년 수능 반영비율 축소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특성과 변천과정을 보면 대학 독자적으로 부여하는 대학별 본고사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고사,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조합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대학별 고사의 경우도 대학 간 입시제도의 차이와 입시과목의 빈번한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배제할 수 없었고, 입시과목의 축소에 따른 국·영·수 위주의 과열과외로 인해 고교교육의 비정상화를 오히려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입시관리능력에 대한 시비도 없지 않았다. 해방 이후의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을 볼 때, 입시개혁을 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대안이 최선이었는지 모르나 돌이켜보면 반성해야 할 점도 없지 않다. 50년의 대학입시 개혁과정에서 반성해야 할 점을 몇 가지로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의 대학입시 개혁은 관리주체의 논쟁에 치우쳤다는 점이다. 대학의 독자적 선발이나 아니면 국가가 개입하느냐의 논쟁이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입시감독 권한행사 간의 관점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던 점이다

둘째, 대학입시 개혁의 논리가 교육적 논리라기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이다. 흔히 정권만 바뀌면 대학입시제도가 바뀐다는 세론이 있을 정도로 입시제도는 노출된 문제점을 급히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져 왔고, 여론에 떠밀려 개혁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셋째, '선발 위주의 사고'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대학입시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대학교육을 이수할 능력이 있는 수학적격자를 판별하는 엘리트 교육관이냐에 따라서 선발 철학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발 위주의 사고에 치중한 개혁은 수학적격자 판별의 기능과 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기능 둘 다 제대로 감안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입시 개혁도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넷째, 대학입시의 전형자료와 절차 그리고 시기 등의 획일화를 지적할 수 있다. 대학입시 기간의 획일화에 따라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대학 입시철'이 사회적 관행으로 뿌리내려 왔고, '고3병'과 '입시가족'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할 정도였으며 '국·영·수 과목'과 '기타 과목'으로 이원화될 정도의 병리적 교육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대학입시 전형자료의 획일화는 주로 국·영·수 위주의 교과성적에 치중되어 왔고, 수능성적이 삶의 성공척도인 것처럼 인식될 정도로 사교육 문화와 교과 위주의 선발문화를 자리잡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고등교육 기회의 제한 측면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대학입시제도는 선발의 관점에만 서 있었기 때문에 '학생 유치'의 관점은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1995년의 대학입시 개

혁 이전까지는 교육복지적 관점의 특별전형이나 비교과 영역의 준거에 의한 잠재적 능력개발 전형, 그리고 교육기회의 확충을 위한 무시험전형 등 다양한 선발의 관점이 부족하였다. 결국 지난 50년의 대학입시 개혁은 교육적 고려보다는 사회적 고려에 치중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전형요소도 교과성적에 의존해 온 점은 앞날을 위해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3. 2002년 입시제도와 7차 교과과정

7차 교육과정은 대학입시의 틀을 바꾸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개편된 것으로 안다. 학생들의 과도한 수업 부담을 덜어 주고,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형 수능제도는 언어, 외국어, 수리 영역 중에서 2과목을 지정하고, 과학탐구, 사회탐구, 직업탐구에서 1개 영역 4과목을 지정하는 것을 표본 모델로 추천하고 있다(2+1(4)).

실제로 전국 각 대학에서 지정한 것을 보면, 수도권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3+1(4)을 채택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대학이나 지방대학들은 2+1(2) 체제를 택하고 있다. 3+1(4) 체제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으며, 2+1(2) 체제는 선택 과목이 너무 적어서 고교교육과정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2+1(2) 체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학생 유치가 시급한 대학들로서는 특정과목을 지정하거나 과도한 과목 수를 지정함으로써 자원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과목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일

단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 기본교육을 마친 다음에 2, 3학년에 걸쳐 선택형 교과목을 이수할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몇몇 과목만 집중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학교는 효율성을 위하여 몇몇 과목만 집중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걱정되는 점은 오히려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육성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교육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 편제에 따라 모든 교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일선 고등학교가 일부 교과목을 선택함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실종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사정을 고려한 대학입시 전형 방법을 찾다보니 대학입시 전형교과목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대학입시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고등학교교육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까지도 배우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은 교육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탐구 영역의 교과목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설하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대입 대비를 위해서 학원 수강을 하거나, 별도로 과외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또한 대학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이유로 도입한 계열 폐지는 오히려 대학선택의 폭을 좁

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인문계·자연계·예체능계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능시험의 언어·외국어 영역에서 인문계·자연계·예체능계 구별 없이 시험을 치르고 같은 차원에서 영역별 수능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도 같은 교과에 동일한 수업이면 인문계·자연계·예체능계의 구분 없이 석차가 매겨진다. 사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에서도 과학 교과목을 배우고, 자연계에서도 사회 교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고 3 때 자연계 학생이 수능의 인문계형을 치르고 인문계열의 대학에 진학하는 진로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 2, 3학년 과정은 심화선택 과정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은 과학 교과목을, 자연계 학생은 사회 교과목을 배우지 않거나 설사 배운다 해도 교양 수준의 교과만을 배우기 때문에 고 3 때 진로 변경은 오히려 곤란하다. 예컨대, 자연계열의 학생이 인문계 심화선택 교과목을 3학년 때 독학을 하여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을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택의 폭을 좁힌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 1 때 인문계·자연계·예체능계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4. 2002년 대학입시제도와 내신

따라서 2002년 대학입시안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요자 중심의 논리나 학습부담을 줄여준다는 논리를 떠나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원칙을 토대로 한 대학입시의 틀로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최소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에서의 학문탐구 활동을 완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은 그렇지 않아도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어렵고 힘든 교과목을 회피하게 하고, 대입준비를 손쉬운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비교육적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입시 전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고등학교교육이 대학입시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즉,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대학입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입시에 의해 지배되는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입에서의 학생부 내신성적 활용을 적극 권장해왔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도 학생부의 내신성적 활용을 더욱 확대하여 교육정상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교육비 지출을 경감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이러한 내신성적 활용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 전국 대학의 학생부 평균 실질반영비율은 2002학년도 9.69%, 2003학년도 8.85%, 2004학년도 8.21% 등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1.4~7.54% 수준이다. 2005학년도에도 서울시내 대학의 학생부 실

질반영비율은 연세대 5~9%, 성균관대 5%, 서강대 8%, 한양대 1.5~6%, 경희대 4.4%, 중앙대 5% 등에 머물렀다. 서울대는 전국 평균치보다는 높지만 2002학년도 15%, 2003학년도 12%, 2004학년도 10% 등으로 반영비율을 낮춰왔다.

대학들의 내신성적 실질반영비율이 낮은 것은 학생부 성적을 불신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진학 실적에 대한 학교 간 경쟁 내지는 학부모들의 강한 압력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하는 비교육적 현상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 성적을 대입전형의 자료로 적극 도입하여 교육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학생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의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정책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현실적으로도 대학입시에 매달려있는 왜곡된 교육문화에서 점수에 매달리는 교육으로부터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 모두 다 자유스러울 수 없다. 더구나 교사의 의지와 사명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현재의 내신성적을 대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2008년 대입개선안에서 담고 있는 것처럼 평어반영보다는 석차백분율 표준편차와 등급 등 변별력을 높이는 상대평가적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평가로 변별력은 있지만 발달적 교육 평가관의 입장에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거처럼 내신성적은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나오게 하는 비교육적 현상을 초

래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선생님들이 올바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평가하여 내신성적 부풀리기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방법이다. 내신성적 부풀리기는 주변 여건과 입시위주 교육에 기인하는 왜곡된 교육문화 속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마디로 신뢰하지도 않는 내신성적을 부풀려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하는 교육문화가 존재하고, 이를 과감하게 떨쳐버리려는 교육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 학생부 성적의 비율을 높여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동안 교육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듯 학생부를 교육이력철로 바꾼다 해도 교육현장에서 집단적으로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하는 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장 선생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옳은 것과 좋은 것에 대한 구분과 원칙을 분명하게 하여 내신성적 부풀리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2002년의 입시 틀이 안고 있는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이번에 발표된 2008년 대입개선방안인 것이다. 2008년 대입개선의 골자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개선안이다.

5.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특징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리더십과 봉사성 등 다양한 능력과 특기를 가진 인재를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잠재력과 적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필요로 한다. 2008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2002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도지만 학교 교육정상화에 더 비중을 둔 개선안이라 할 수 있다.

2008년의 대입제도 개선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려는 특징을 지닌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낮아 대학에서 반영을 줄여왔던 것을 감안해서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점수와 석차등급제를 도입하고 원점수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제공한다. 특히 석차등급을 9등급으로 제공하고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 내용, 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독서 메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하여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제공하는 대신 9등급으로만 제공함으로써 수능의 반영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영·수 위주의 학업성적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수능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를 경감토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방식도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연 2회 2일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고교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사출제위원을 50% 이상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셋째, 학생선발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사정관을 두어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선발모형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설립목적과는 달리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받아온 특수목적고에 대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동일계 특별전형에 도입하여 이러한 논란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고교등급제 등에서 비롯된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그리고 이념 간 갈등의 소지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균형선발 등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구성원 다양화지표를 개발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08년도 대학입시개선안은 많은 논란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특기, 리더십, 봉사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우수학생으로 정의하고 그 동안 시험성적과 석차를 강조해온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안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생선발의 주요 전형요소인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낮아 선발과정에서 어렵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특히 수능이 9등급화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화되고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못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따라서 2008년의 대입 개선안은 어떤 형태로든 고교교육체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의 기본취지가 공교육 정상화이지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 측에서는 변별력 있는 전형자

료와 요소가 부여될 때 대학사정관제도를 활용, 특성 있는 선발이 가능할 것이고 고교 역시 내신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주어질 때 고교교육 내실화와 함께 실력과 잠재가능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이 지니고 있는 쟁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첫째, 수능의 9등급화의 경우 총점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별 9등급을 가지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 영역의 경우만을 예로 든다면 1등급이 24,000여 명이나 되므로 다분히 자격고사적 성격을 탈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다 받는 학생은 870여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다단계 선발이 확산될 경우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수능의 성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생부의 교과영역(학습활동 및 성적, 특기, 성과, 태도 등 교과활동) 및 비교과영역(봉사활동, 특별활동, 독서활동 등)을 얼마나 충실한 전형자료로 제공하느냐의 여부가 내신 신뢰도 제고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단위 학교별로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별 '학교평가 개선 장학지원단'을 활성화하여 신뢰도제고 노력을 한다 해도 완벽한 장치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은 교사의 평가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학부모 등과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셋째,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학력 차에 대한 충분한 해소장치와 관련된 쟁점을 들 수 있다. 고교등급제는

안 되지만 개개인 학생들의 학력 차는 변별할 수 있고 선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입시에서 고교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와 관련된 쟁점이다. 고교교육이 종래의 암기위주 학력고사 방식이나 단편적 지식의 습득에 치중하는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틀로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연계체제를 갖느냐가 문제가 된다. 문제는행식으로 전환해 고교 교과과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환여부와 관련된다.

다섯째,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활성화와 관련된 쟁점으로서 교육복지차원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역별 잠재능력 있는 학생들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의 차원을 넘어 소외계층과 교육격차계층을 함께 포괄하는 '교육평등'의 틀로 전환하는 과제가 있다. 학생들의 학력 차는 변별할 수 있고 선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학의 선발자율권 요구와 관련된 쟁점이 있다. 정부는 3년정책 외에는 모든 입시자율을 부여했다고 하지만 대학 측은 아직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항을 관여하지 말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형편이다.

일곱째,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더라도 개인 학생들의 학력 차에 대한 변별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고교등급제는 고교단위간의 학력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배의 성취수준에 따라 후배들에게 적용하는 연좌제적 성격이 강하

다. 그러나 학교간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서의 개인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전형자료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내신인증제'와 '교사학력추천제' 등의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⁷⁾

Ⅲ. 환경변화와 대학입시의 방향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교육목표 설정, 교육내용 구성, 교수·학습활동의 전개와 평가 활동 등 전체 교육과정(educational process)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적 교육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대학진학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의 측면에서 학생선발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라 할 수 있고, 최근 개편된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대학입시제도의 변화 또한 교육내적 환경의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대학입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라는 점은 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의 효율화라는 측면과 대학진학자 감소와 관련된 교육 인구학적 관점에서 대학입시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창의적 지식인재 육성과 대학입시의 다양화

지식기반사회란 부와 국가경쟁력을 창조하는 중심적인 활동이 자본의 배분이나 노동의 투입뿐만 아니라 지식을 배분하고 적용하는

7) 이현청(2004), "고교등급제의 문제점과 대안", 『사학연금』, 2004. 11월호.

8) 이 부분은 대교협 진학상담교사 연수자료(2005)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것이 매우 중요시되는 사회를 말한다. 지식인력집단(knowledge worker)이라는 용어를 주창한 피터 드러커(Drucker)는 그의 저서 『탈자본주의사회』에서 지식에 대해 한마디로 오직 응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응용되는 지식은 '매우 전문적인 것'을 뜻한다. 그에 따르면, 20세기 초까지 일반교양이나 인문교양이 개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 발전의 초점은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Drucker, 1993).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책이나 데이터뱅크 또는 소프트웨어에 머물러 있는 지식은 오로지 하나의 정보(data)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식이란 언제나 사람에 의해 구현되고 창조되어 재생산되고 응용된다는 점에서 누구나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의 주도적인 사회집단은 지식을 배분하고 적용하는 지식적용인력집단(knowledge worker)이다. 드러커는 지식사회에서 지식활용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그 가운데 특히 정규적인 교육과 함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사회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될 것이며 특히 창의적인 최신 지식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업연령을 훨씬 초과해서도 평생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는 개인이나 기업의 변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시대에 적합한 사회환경의 변화도 요구한다.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형태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사회윤리나 정서, 교육 등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려면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구성원들

이 그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변화를 가장 먼저 이끌어 내야 한다.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그 사회를 건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교육은 소수의 정보엘리트를 양성하기보다는 다수의 지혜로운 지식활용인력을 배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가 지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개발과 교육의 방향은 자명하다. 즉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사람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 중에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분석·종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적절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탐색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사람, 자신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남과 협력하고 선의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학교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교육내용과 수업방식을 탈바꿈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정보통신혁명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합한 형태인 개인의 사회적·직업적 적응과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교육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학입시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입시에서 학생선발 방법을 다양화하지 않는 한, 창의적인

재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002년 대학입시 개선안에 따라 대학들은 다양한 학생선발을 시도했다. 이러한 2002년 대학입시 개선안의 다양화 방침은 2006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2008년도에는 내신반영율을 높이고 수능반영을 상대적으로 낮춰가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대학입시는 ① 선발시기의 다양화, ② 전형요소의 다양화, ③ 전형유형의 다양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모집시기에 있어서도 수시 1, 2학기 2회, 그리고 정시의 가군·나군·다군 등으로 선발함으로써 선발시기이 다양화되어 있다. 예컨대, 매년 5월에는 수시 1학기 대입이 치러지고 있으며, 9월에는 수시 2학기 대입이 실시되고 있고, 12월에는 정시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어 대입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연중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학마다 모집시기별, 전형 단계별로 각 요소의 반영비율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전형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컨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에서도 전체 교과를 반영하는 경우와 일부 교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1, 2, 3학년별로 각각 20, 30, 5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평어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도 있다. 때로는 수사에서 평어와 석차를 각 50%씩 섞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논술의 경우에도 우선 1단계 선발의 자료로 쓰는 대학도 있고, 영어 지문을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면접도 인적 확인으로 그치는 정도에서부터 시사 상식과 인성, 적성, 사회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

고, 심층면접으로 전공 실력을 평가하는 수준까지 다양하다. 또한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전형요소로 자신만의 특성에 맞추어 대학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전형유형도 과거에 비해 많이 다양화 되었다. 특히 특별전형의 유형이 많이 확대되었다. 예컨대, 2006학년도 특기자 특별전형과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특기자 특별전형은 39개 유형,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유형은 31개 유형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 특기자전형은 분야별로 특기와 적성을 학생선발의 유형으로써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건학정신과 우수 학생유치라는 점에서 특기자전형과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확대될 전망이다.

2. 대학진학인구의 감소와 대학입시 자율화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기본적인 전제는 대학의 자율화 확대이다. 2002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은 ① 전형요소의 자율적 결정과 독자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존중하는 자율성 부여, ② 복수지원·특별전형·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 등을 허용함으로써 진학자의 대학선택 기회 확대, ③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과 잠재 가능성 등을 준거로 삼는 전형요소와 선발과정에 대한 다양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고등정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 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의 원칙

〈표 2〉 2006학년도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유형

특기자 특별전형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취업자	로봇	국가유공자 및 자손	간호와 남자
문학	게임	사회봉사자 및 자녀	검정고시출신자
어학	기능	선·효행자	대안학교출신자
한문	만화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자녀	지역고교출신자
논리논술	의상	학교장, 교사추천자	기업계승자
수학	원예	기타 추천자(학교장, 교사 이외)	공무원·교직원자녀
과학	산업공예	기능우수자(특기, 자격증, 경력)	종교인·자녀
전기·전자	식품조리	교과성적(내신)우수자	항공종사자·자녀
건축	영상	특정전공우수자	동일직종종사자·자녀
지리	사진	수능성적우수자	선원자녀
농업	바둑	어학우수자	인문계고교출신자
음악	예능	조기졸업자	
미술	서예	학생회임원, 리더십	
무용	선반용접	개근자	
체육	리더십	각종대회입상자	
방송·연예	봉사	수상자	
연극영화	자기추천	기관장표창자	
디자인	자격증	해외유학생	
컴퓨터정보화	복합유형	대학과정수료졸업자	
발명		만학도·전업주부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학년도 대입전형 요강

을 중시했던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도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대학교육은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대학 졸업장에 대한 많은 수요를 창출하였고, 이러한 수요는 일부 부실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을 확보하는 데 별로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날을 돌아볼 때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어 학생정원의 통제권을 받았고, 공정한 입시관리라는 목적하에 학생선발을 국가가 관리하여 왔다. 해방에서 대학정비령이 마련된 1961년 5.16에 이르는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40여 년간 대학은 학생 선발에 직접, 간접으로 통제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소위 '3不'로 불리는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와 고교 간 등급화 그리고 기여 입학제를 제외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바탕으로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지원자 수의 감소로 미충원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율화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 부족시대 지만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입학전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근간에 '3불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2008년 입시제도에서 수능등급화 등에 따른 전형요소의 변별력이 낮아진다는 견해 등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⁹⁾

대학입학지원자 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진학대상 연령인구를 예측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663,000명에 이르는 진학대상 연령인구는 2008년까지는 해마다 19,000~45,000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2009년도에 현재 수준을 회복한 후부터는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1년도에는 70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1년도 이후부터는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감소현상이 계속되어서 2050년도에 이르러서는 2003년도의 52% 수준인 367,000명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감소 추세는 대학들의 미충원률을 확대시켜서 대학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충원률에 영향을 주는 학령인구의 변화 외에도 e-learning, blended learning 등 새로운 교육방법의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대체 고등교육기관(사이버대학, 온라인대학 등)들은 기존 대학들과 경쟁관계를 형

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신입생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진학자 수의 감소로 많은 미충원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국공립 대학의 등록율은 94.5%, 사립대학의 등록율은 88.3%로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 등록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전남, 강원, 전북 소재 대학들이 학생 정원 8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주와 제주 소재 대학들도 80%에 겨우 턱걸이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말해주듯이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당장은 다양한 대학 내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지만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태이고, M&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위론적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을 특성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등록이 저조한 대학일수록 그 심각성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¹⁰⁾

국내대학들이 겪고 있는 미충원 문제의 주요 원인은 대학입학지원자 수와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자원 부족과 수도권집중화 및 특정분야(의학, 약학, 교육 대학)의 편중지원 경향을 들 수가 있다. 특히 진학대상 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지원자 수의 감소는 미충원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학정원 대비

9) 이현청 등(2005), "3불정책의 의미와 과제"(미발간 자료).

10) 이현청(2005), "대학특성화의 의미와 방향," 『대학교육』, 137, pp. 25-34.

〈표 3〉 2005학년도 지역별 대학 등록율 실태

(단위 : %)

지 역	등록율	미등록율	비 고
서 울	98.5	1.5	
부 산	94.4	5.6	
대 구	97.1	2.9	
인 천	97.7	2.3	
광 주	80.1	19.9	4
대 진	86.1	13.9	
울 산	98.1	1.9	
경 기	95.7	4.3	
강 원	78.3	21.7	2
충 남	89.9	10.1	
충 북	86.2	13.8	
전 남	66.6	33.4	1
전 북	78.8	21.2	3
경 남	87.2	12.8	
경 북	87.5	12.5	
제 주	81.0	19.0	5
전 체	89.6	10.4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5), 2005년 대학입시 미등록현황 자료

진학대상 연령인구비가 2.15에 달했던 2001학년도에 비해 2005학년도에 비해 2.15에 달했던 2001학년도의 경우 전체 대학의 미충원률은 3.9%에 머물렀던 반면, 진학대상 연령인구비가 1.85에 머물렀던 2003학년도의 경우는 미충원률이 9.8%로, 진학대상 연령인구비가 1.66으로 더욱 낮아진 2005학년도의 경우는 미충원률이 10.4%로 증가되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학의 미충원 문제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학생정원 미충원이라는 대학 내외적

변화와 관련하여 대학입시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대학입시의 다양화와 완전 자율화의 방향이다. 즉, 대학마다 학생정원을 확보하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저마다 다양한 학생선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학이 학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학생선발은 완전 자율화에 맡기지 않을 수 없다. 완전 자율화 상황에서 대입전형 유형·방법은 다양화의 차원을 넘어 복잡하게 될 것이다. 대학이 학생선발 방법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등교육은 그 본래 정해진 목적과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다만 여전히 학벌 중시의 교육관행이 알게 모르게 교육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선발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전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둘째, 지역에 따라 학생정원의 미충원 편차가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별 대학에 따라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은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과는 달리 직업전환 내지는 직업 재교육을 원하는 성인학습자와 직장인에게 대학의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할 수 있는 대학입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별 대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아시아와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비롯하여 외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과 외국에 나가있는 유학생을 비교할 때,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이 10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으로 몰리는 외국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해 '전 세계 학문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기존의 EU대학 간 협력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레오나르다빈치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른바 에라스무스 문드(Erasmus Mundus)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세계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유럽연합 내 대학원 프로그램에 등록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¹¹⁾

우리나라 대학들도 외국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 선발시기,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진국을 획일화하기보다 지역과 대학특성에 따라 분권화가 필요하고 수능체제도 자격고사나, 학력고사나, 적성고사나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응시횟수, 그리고 선택수능과 필수수능 등 여러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내신의 변별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IV. 맺음말

광복 이후 우리의 대학입시 체제는 크게는 15차례, 세부적으로는 36차례나 바뀌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이러한 사실은 대학입시가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관련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변화는 큰 폭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변화된 사회 각 계층의 다양화된 요구가 대학입시라는 보수적인 제도를 자주 바뀌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에 사교육비 경감을 내건 대학입학정원의 대폭 증원, 수도권 대학입학정원의 증원 불가방침 고수, 최근 수도권 고등학교

11) 이현청(2004), “국제화와 대학개방의 과제”, 대교협국제세미나 기초강연자료(서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 pp. 11-12

의 평준화를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한 것, 예
비고사 → 학력고사 → 수능시험으로의 변경,
그리고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제도 변경
등 그 동안의 굵직한 변혁이 사회적·정치
적·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 교과목
선택의 다양화, 잠재적 능력 개발의 중시, 특
성화 강조라는 세부 제도의 마련은 교육철학
적 당위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교육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혁명으로 경제의 원리와 생산의
축을 달리하는 지식기반사회의 환경 변화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형성하면서 교육에 대
한 요구를 과거와는 달리하고 있다. 흔히 말하
는 창의적 인재양성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측
면에서도 개인의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전제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진학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대학입시의 자율화와 다
양화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것이며 대학입시
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대학입시제도를 수립하는 대학 당국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
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결론삼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대학입시에 대한 역할 변화이
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라
는 점에서 대학입시를 주도했었고, 최근에는
자율화 방침에 따라 많은 부분을 대학의 자율
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자율화 상황에서 대학
입시는 다양화되었으며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
다. 이제 정부는 대입제도 수립과 시행의 공정
성 확보 못지않게 대입정보 격차에 따른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대입 자율화 시대 대학들의 대입전형
계획 수립의 측면이다. 대학은 건학정신과 학
생정원 확보, 특히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입
전형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이때 대학 당국
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배려하는 대
입전형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은
모집시기별로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특기자 선발 방법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더욱 다양화할 때 학생유치가 용
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입시가 대학자율에 맡겨지고 다양한 선발방법
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교육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수요자 중심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은 그렇지 않아도 의존
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요즈음 학생들에게
어렵고 힘든 교과목을 회피하게 하고, 대입 준
비를 손쉬운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비
교육적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대학입시전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전개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
하는 현직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바람
직한 입시 문화의 건설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에서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각오
와 노력이 남달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
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우선 다
양한 입학전형 방식에 대한 폭넓은 정보 수집
과 분석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자리를 사설교육기관의 입시전문가들에게 내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예컨대, 내신성적 부풀리기의 풍토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확보는 어렵다. 이러한 풍토에서 학생부 활용확대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는 기대할 수 없다.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대학진학지도는 학생의 인생설계를 도와 줄 수 있는 진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학지도가 합격을 족집게 질하는 일이 아니라 장래를 설계하는 창조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를 수차례 바꾸어 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항상 교육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대학입시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 없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대학입시제도를 바꾸는 것도, 대학입시 대비를 위한 진학상담을 하는 것도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가만히 두어도 밝게 자라날 아이들을 시험에 찌든 어두운 얼굴로 다니게 해서 안 된다. 방과 후 학원으로 내몰렸던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운동장에서 사이 좋게 뛰어 놀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단계별 단절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초·중·고 대학의 교과과정을 연계시키는 등의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참교육 차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현청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일리노이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및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교수, 남일리노이대학교와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UMAP(아·태 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 의장, CHEA(미국평가인정기구) 국제이사, 세계대학협의회(IAU) Higher Education Polic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학습사회』, 『교육사회학』, 『21세기를 대비한 대학의 생존 전략』, 『학습하는 사회』,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 『미국교육의 반성』 외 다수가 있다.